

#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38 호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160호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17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1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60호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가. 조례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중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자격기준(자본금 확보) 완화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른 법령정비

**□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기준변경(안 별표)
- (현행) 가스용품제조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개인의 경우 자산능력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변경)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을 것
-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번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별표)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9일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산업에너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2층(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안전관리과(산업에너지팀)
- ▷ 전 화 : 032)760 - 7467 [FAX 032)760 - 7809]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안전관리과장

### 1. 제 안 이 유

- 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431(2020. 7. 6.,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요건 관련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호 관련, 과도한 규제로 개선 건의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자본금 확보 관련 조항 수정코자 함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번호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기준 중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등 불합리한 규제 조항 수정(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431)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번호 현행화

###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6조(허가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7월 예정
-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조”를 “법 제5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li> <li>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의 다), 라)의(1), 마)의(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li> <li>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li> <li>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중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li> <li>5.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li> <li>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li> <li>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li> </ol>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li> <li>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6】 제1호가목1)가) · 2)다) · 5)가) · 5)나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 것.</li> <li>3.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600㎡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을 확보할 것.</li> <li>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li> </ol>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재함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가스용품 제조사업	1.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제5조----- -----.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5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 ----- ----- -----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1.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3】 제1호 가목 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2.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의 (다), (라)의 (1), (마)의 (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4.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5.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5.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이 16m 이상, 도로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만,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8m 이상, 부지일면의 길이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사업종류	허 가 요 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1. 허가지역을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허가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6】 제1호가목1)가)·2)다)·5)가)·5)나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할 것.	
	3.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600㎡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을 확보할 것.	3.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600㎡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을 확보할 것.	
	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대지를 접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까지 최단 직선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업소상호간의 거리는 타 구의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용기보관실 외벽기준 500m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합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은 차량에서 용기를 상하차시 용이하도록 차량적합 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동일부지내 있어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 허가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용도를 변경하여도 된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8.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9. 토지 및 시설은 임대도 가능하며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현행		개정안	
사업종류	허가요건등	사업종류	허가요건등
가스용품 제조사업	1. 가스용품제조의 원활한 운용을 할수 있는 자산능력이 있을 것 (자본금 3억원 이상)	가스용품 제조사업	1.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안정된 공급과 운용을 위하여 개인의 경우 자산능력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다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가스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공증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용]

##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7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68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김*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40, 206동 10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폐문부재
2	정*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377		폐문부재
3	김*애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17, 103동 B01호		폐문부재
4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111, 102동 803호		폐문부재
5	JIN **NG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로53번길 6-18		폐문부재
6	허*철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71, 112동 307호		기타
7	이*정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911, 322호		폐문부재
8	LIU *I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108-1, 103호		폐문부재
9	한*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3. 07. 19. ~ 2023. 08. 02. (15일간) ※초일산입

##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